

### 한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 논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남 나주시 소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약칭 한전공대)가 지난 2022. 3. 2. 건물 1동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서둘러 개교하였다. 2025년까지 캠퍼스공사 등 운영예산은 약 8,289억 원이며, 한전 및 발전자회사로부터 5,409억 원, 정부의 전력기반기금 1,000억 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2031년까지는 1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중 1조 원 가량은 향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다.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 또한 자원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뿐만 아니라 한전공대는 설립추진 과정에서부터 갖가지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재정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의 적법성 논란, 설립인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혜 논란, 시공사인 (주)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그것이다.

한편 도서 및 벽지 지역의 전력공급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재원을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데(현재 부담요율: 전기요금의 3.7%), 기금의 운영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을 용도별로 분리하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지원 등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변은 한전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 논란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의 적정성 논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2022. 7.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재원**